

2018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미래전략개발부 박은수 선임연구원
이시은 선임연구원
윤경수 선임연구원
김은서 선임연구원
경규나 선임연구원

I. 금융시장 전망

II. 금융산업 전망

2018년 기준금리는 한 차례 이상 인상될 전망이나 상반기 중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상반기 중 횡보세를 지속하다 하반기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동반 호조 속 신흥국의 우세한 경기성장세 및 이에 따른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신장에 따른 수출 호조,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대외지급능력 개선세 등에 힘입어 하락할 전망이다.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경기 개선,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수출 및 기업이익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배당 매력 감소, 북한 리스크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업 경영실적은 생산적 금융 등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관리 등 여파로 성장성이 전년 수준에 그치고, 수익성도 이자이익 증가를 규제·경쟁강화 등이 상쇄하면서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자산건전성은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 신용위험 증가로 추가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자본적정성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지속 등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은 규제 강화, 자동차금융시장의 성장 둔화 등으로 영업자산 증가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경쟁 심화 및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으로 2018년에는 경영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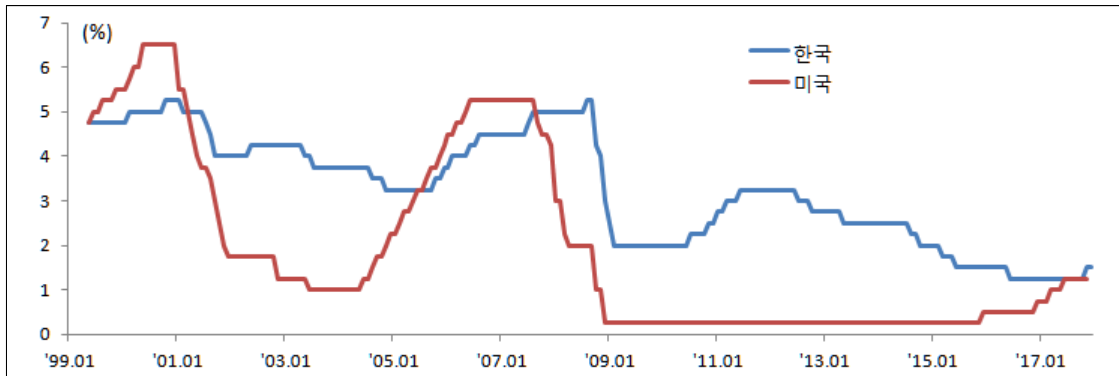
1. 금리

□ 2018년 중 기준금리 한 차례 이상 인상 전망

○ 금통위는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

-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인상(3.00%→3.25%) 이후 8차례 연속 인하되어 2016년 6월부터 1.25%로 유지
- 글로벌 긴축기조, 2017년 3분기 성장률 호조 및 GDP갭률 플러스 전환 등에 따라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

〈그림 1〉 한국 및 미국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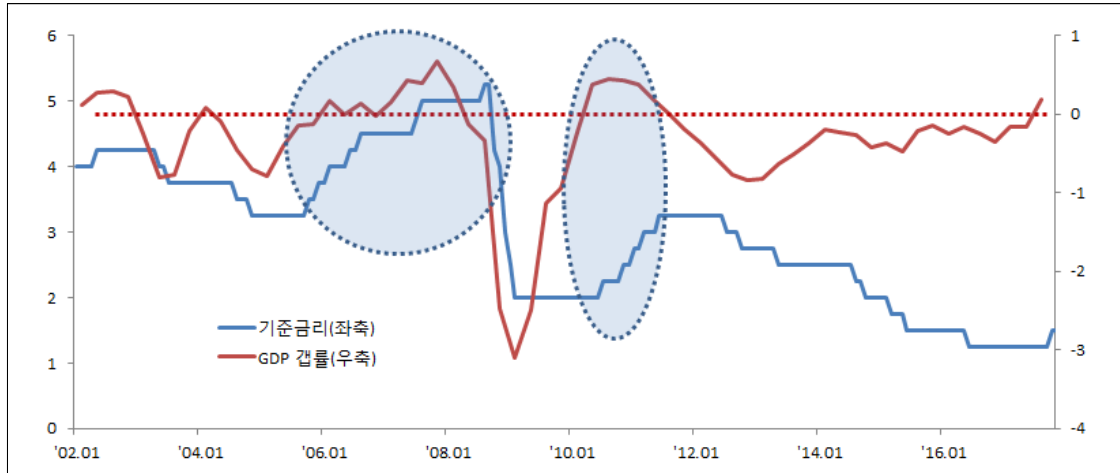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FRB

○ 2018년 중에도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경기 개선 속에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GDP 갭률의 플러스 상태 지속과 함께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국과의 사드 갈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민간소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압력 확대와 함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더욱 확고해질 전망
- 다만, 앞선 기준금리 인상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상반기 중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그림 2〉 기준금리와 GDP 갭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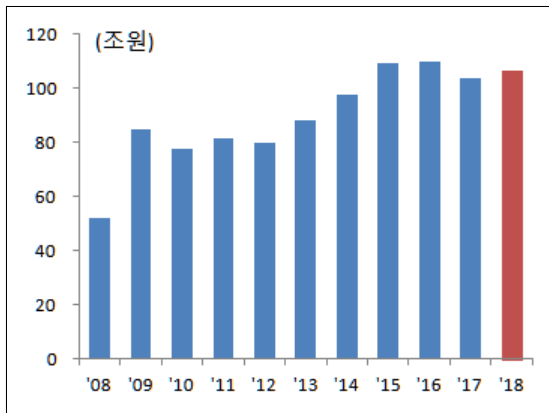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산업은행

□ 시장금리는 횡보세 이후 완만한 상승 전망

- 2018년 중 시장금리는 상반기 중 횡보세를 지속하다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 하반기에 접어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공급측면에서 금리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하반기 시장금리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국고채 예상 발행규모는 106.6조원으로, 2017년 대비 2.9조원 증가에 그쳐 물량부담이 크지 않으며,
 - 공사채 총량제 폐지에 따른 우량물 공급 확대가 국고채 수요의 일부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보험사, 은행들의 확고한 수요기반이 이를 상쇄할 전망
 -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 및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과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은 두 차례로 첫 번째인 1999년 6월에서 2001년 2월 사이에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이후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에는 오히려 대규모로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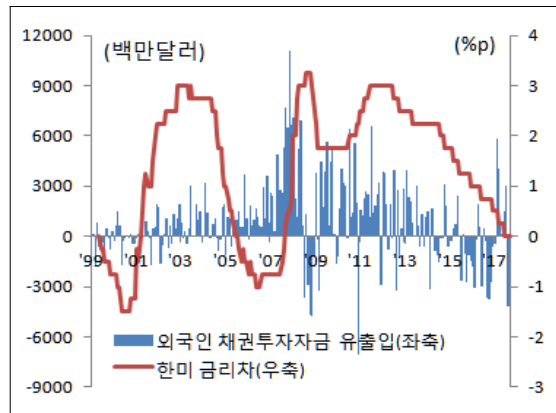
- 역사적인 경험과 더불어 투자목적, 투자기간 및 자산배분 전략 등이 투자자들간에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내·외 금리차 만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우며,
- 영국, 프랑스 등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신용등급(Moody's 기준 Aa2), 양호한 재정 건전성, 견조한 성장세 등도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이탈을 제약

〈그림 3〉 국고채 발행규모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 4〉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입 및 한미 금리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F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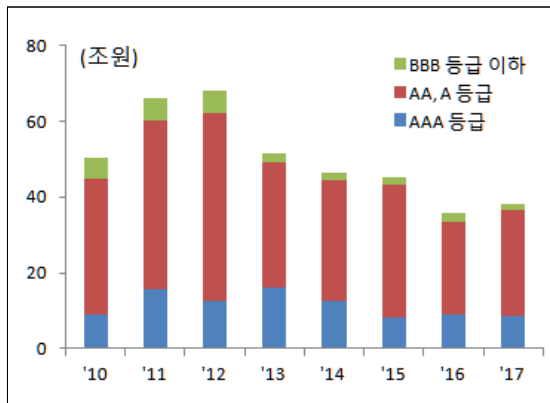
- 다만 민간소비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시장금리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영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회사채 시장, AA 및 A등급 중심으로 순발행 지속 전망

- 2018년에도 회사채 발행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순발행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발행규모는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
- 회사채 시장은 AA 및 A등급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A등급 이상과 BBB등급 이하 회사채간의 양극화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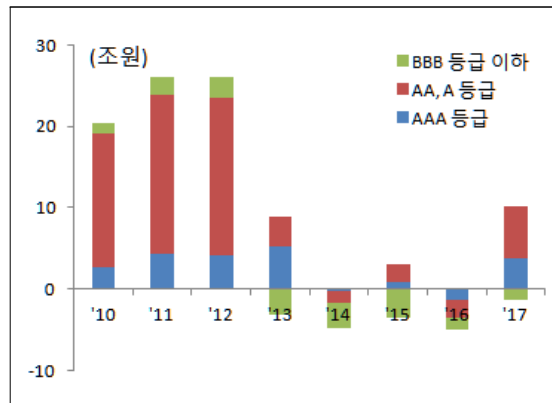
- AAA등급의 경우 공사채 총량제 폐지에 따른 투자수요 분산,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라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물 발행은 일반기업에 대한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

〈그림 5〉 회사채 발행규모 추이



자료 : Infomax

〈그림 6〉 회사채 순발행규모 추이



자료 : Infom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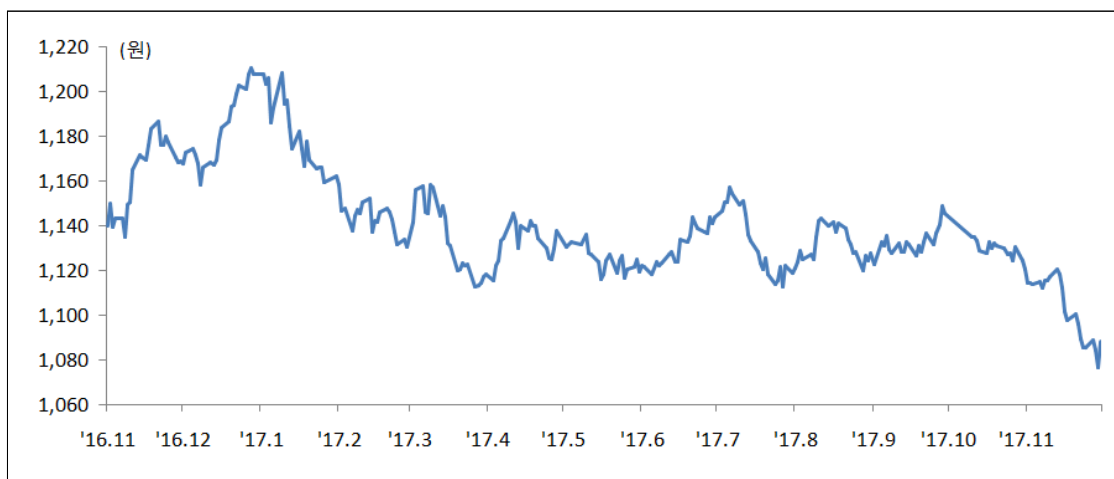
2. 원/달러 환율

□ 2017년 원/달러 환율은 국내 펀더멘탈 개선 등으로 하락세 시현

- 원/달러 환율은 2017년초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와 관련한 원화 강세 압력 등으로 하락 후 수개월동안 1,110원~1,160원 내에서 횡보세를 지속하다 추석연휴 이후 국내 3분기 GDP 성장률 호조 등으로 큰 폭 하락
- 연초부터 국내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弱달러 선호 발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 등으로 하락 출발
- 2월말에는 사드 부지가 확정되며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환율 급등이 나타난 바 있으나 곧 다시 반락
- 이후로는 1,110원~1,160원 구간 내에서 미국의 환율보고서 우려, 북한 도발 등의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

- 그러나 추석연휴 이후로는 북한 리스크가 일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한편,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사드 이슈 해소 기대, 국내 3분기 GDP 성장률 호조 등으로 큰 폭 하락

〈그림 7〉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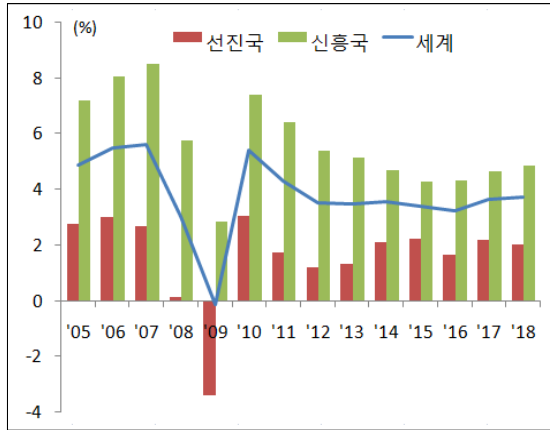
자료 : Infomax

□ 2018년에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호조, 완화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될 전망

- 세계경제 호조, 특히 신흥국 위주 성장세가 예상되며 이는 원화에도 강세 압력으로 작용 가능
 - IMF 경제전망(2017년 10월)에서는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7년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특히 대내외 수요 증가에 따른 교역 신장세, 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신흥국의 성장세 호조를 예상
 - 한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인 JPMorgan의 글로벌 종합 PMI¹⁾는 2016년 2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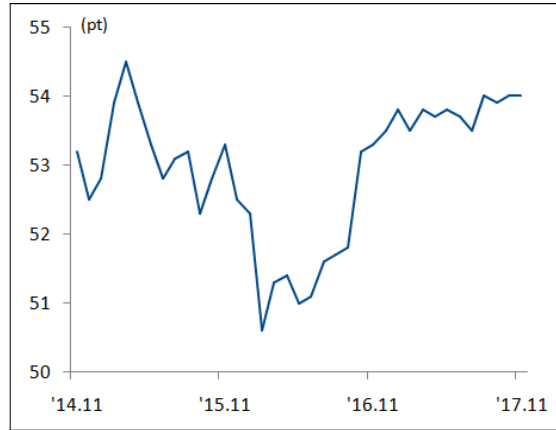
1) Purchasing Manager's Index. 기업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에 대해 설문을 통해 점수화한 지표로 50pt를 넘으면 호황, 미만일 경우 불황을 의미

<그림 8>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 IMF

<그림 9> JPMorgan 글로벌 종합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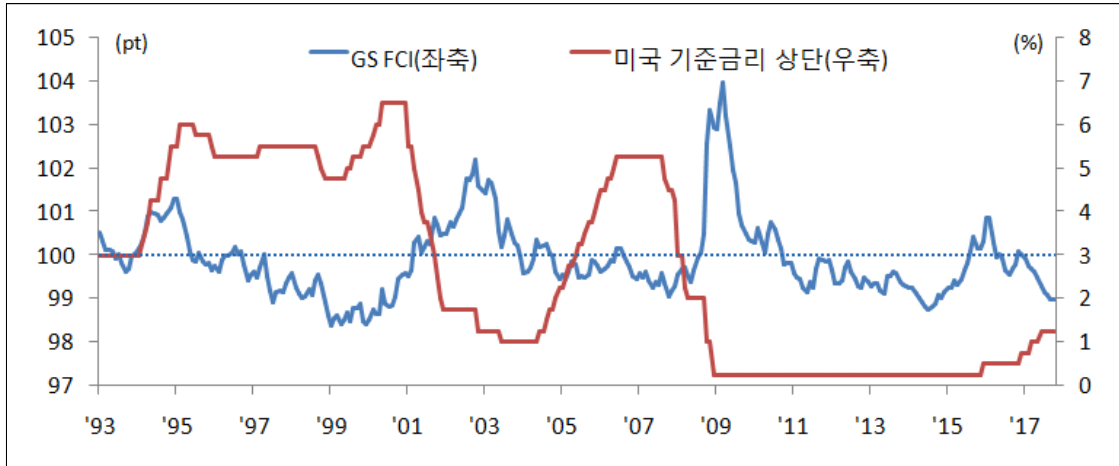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외로 가속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18년까지는 완화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미국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2015년말 당시의 시장 반응과 달리, 2016년 말부터 2017년 중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는 한편 연준 보유자산의 축소까지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여건을 나타내는 골드만삭스의 FCI²⁾가 기준점인 100pt를 밑돌며 완화적 시장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
 - 이는 미국 연준이 경제 성장세를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을 강조해왔기 때문으로 해석
 - 2018년에도 연준의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외로 가속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GS FCI(Goldman Sachs Financial Conditions Index)는 주요국별 금융시장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국의 FCI가 100pt 밑으로 하락하면 금융시장 여건이 완화적이며, 상승하면 긴축적이라는 의미임. 통화정책의 효과는 실물시장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기준금리 수준만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FCI는 통화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는 해당국가의 성장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미국 FCI의 100bp(1pt) 상승(곧, 금융시장 여건이 긴축적인 상황)은 4분기 이후의 성장률에 0.75%p 하락, 8분기 이후의 성장률에는 0.4%p 하락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0〉 GS FCI 및 미국 기준금리(상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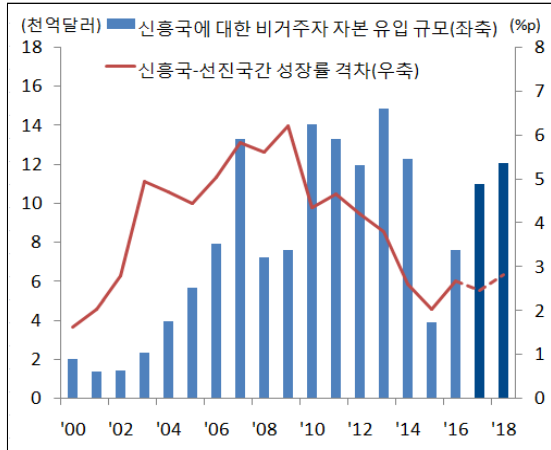


자료 : Goldman Sachs, Bloomberg

-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와 완화적 금융시장 여건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대한 자금유입 가능성과도 연결
 -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비거주자의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규모가 2015년 신흥국 전체 GDP 규모의 1.5% 수준인 7천6백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GDP 대비 약 4.0% 수준³⁾인 1.1조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또한 2018년에도 전반적인 세계경기가 확장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경기호조가 뚜렷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여전히 신흥국 주식가치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점,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1.2조달러의 비거주자 자본이 신흥국에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2017년의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 수출 호조 등에 힘입은 국내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추가 유입 및 이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
 - 다만, 내국인의 해외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일부 환헤지를 동반하지 않는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 수요가 대기 중인 바, 환율에 대한 영향이 다소 상쇄될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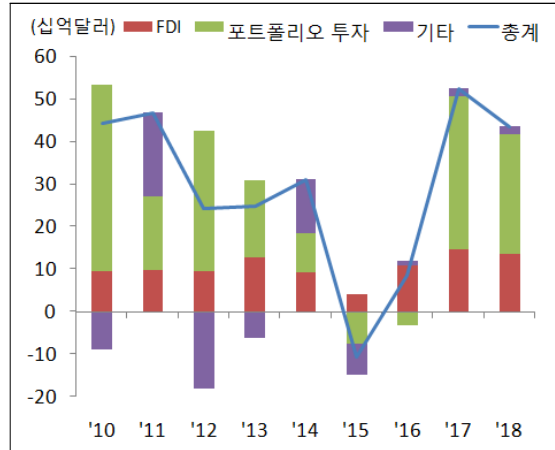
3)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7년 당시)에는 GDP 대비 약 9% 수준을 상회한 바 있음

〈그림 11〉 비거주자의 신흥국 자본유입 및 선진국-신흥국 간 성장률 격차 추이



주 : '17년~'18년은 IIF 및 IMF 추정치
 자료 : IIF('17.10),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IMF('17.10)

〈그림 12〉 한국에 대한 비거주자의 자본유입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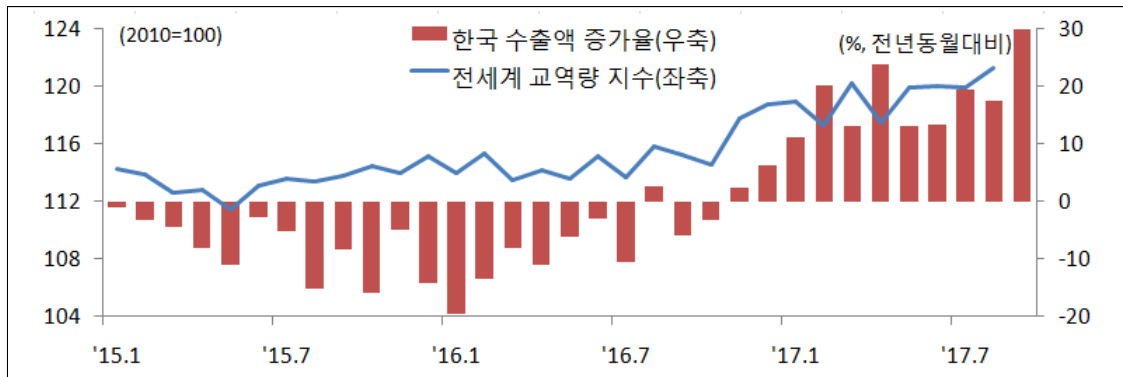


주 : '17년~'18년은 IIF 추정치
 자료 : IIF('17.10),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 대내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탈 개선 및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등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WTO 및 IMF 등 대부분의 기관들은 2018년 세계교역 규모가 2017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역시 우호적 대외환경 등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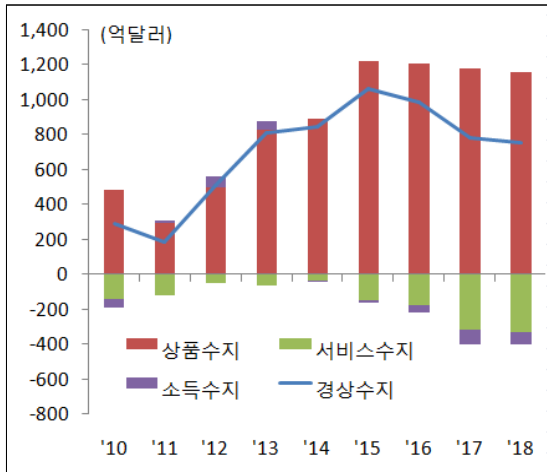
〈그림 13〉 전세계 교역량 지수 및 한국 월별 수출액 증가율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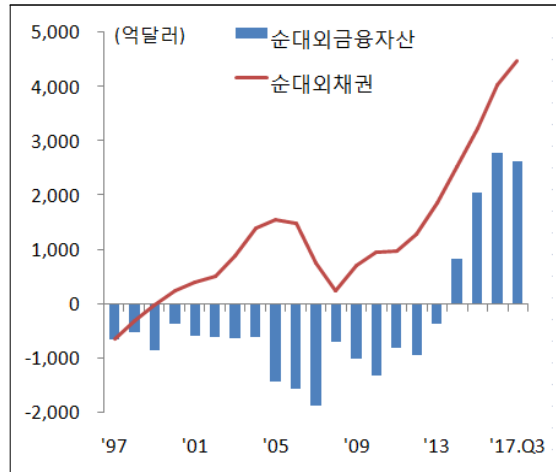
-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및 대외지급능력 개선세 역시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
 - 경상수지의 경우 2012년 3월 이후로 역대 최장기간 흑자를 기록 중이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어 연간 750억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
 -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2017년 3분기 기준 4,474억달러로 통계작성년도인 1994년 이래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며,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국제투자잔액도 2,629억달러를 기록
 - 상기와 같은 추세는 원화 펀더멘탈 개선을 의미하며 원/달러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14〉 경상수지 구성요소별 추이 및 전망치



주 : '17년~'18년은 한국은행 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17.10)

〈그림 15〉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및 순대외채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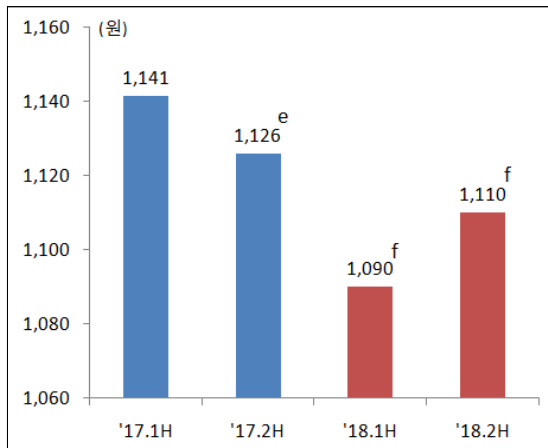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종합적으로 2018년에는 우호적 대외 여건 및 국내 펀더멘탈 개선 등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우세하여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100원으로 하락할 전망

○ 2018년 원/달러 환율은 2017년(1,134원) 대비 하락한 연평균 1,100원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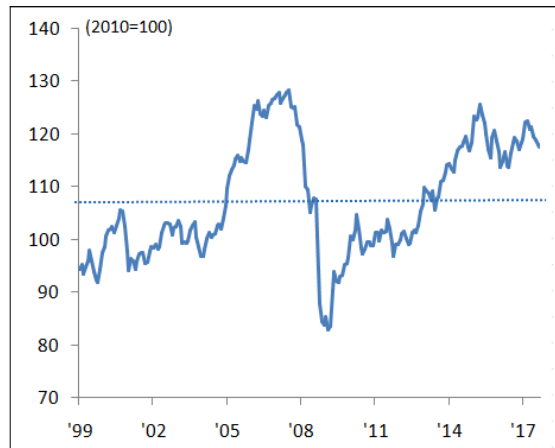
- 우호적인 대외 여건, 즉 세계경제 동반 호조 속 신흥국의 우세한 경기성장세, 완화적 금융시장 상황 등으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전세계 교역 신장에 따른 수출 호조,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및 대외지급능력 개선세 등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원화 강세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 하반기 이후로는 이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반영될 수 있어 다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
- 이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

<그림 16> 원/달러 환율 반기 평균 전망



자료 : Infomax, 산업은행

<그림 17> 원화 실질실효환율



주 : 점선은 1999년부터 장기평균인 107.3 수준
 자료 : BIS

- 한편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의 위험 요인에 유의할 필요
 -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라도 재발 가능하며 대내외적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하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또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대두될 수 있는 바, 예상과 달리 이들 국가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완화적으로 작용하던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급변할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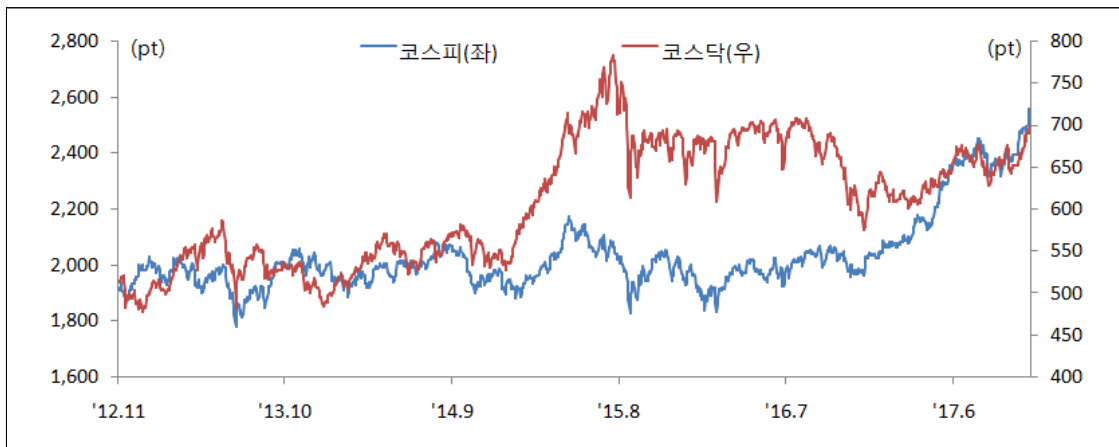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기조는 일반적으로 달러화 가치 약세 재료를 해석되나,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교역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한·미 FTA 재협상도 예정되어 있어 수출 감소로 인한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 이슈가 달러화 약세보다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

3. 주가

□ 2017년 코스피는 국내외 경기,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 2017년 코스피는 연초부터 국내 수출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보이는 가운데 3월 21일 2,178.38pt를 기록하며 2011년 중순 이래 지속되어 온 박스권을 돌파
- 이어 대내외 우호적인 증시 환경 속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美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등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
- 그러나 이후 대내외 경기 개선, 글로벌 증시 호조, 국내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른 IT업종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 11월 3일에는 2,558.0pt로 사상 최고치 기록

〈그림 18〉 국내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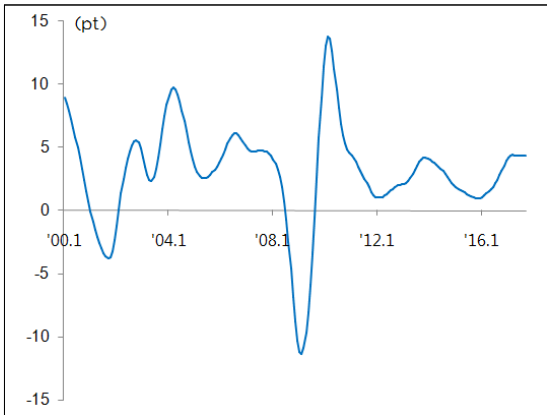
자료 : Infomax

□ 2018년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기 개선,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 등에 힘입어 상승 전망

○ 2018년 국내 증시 상승 전망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개선,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수출증가 및 기업이익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먼저 2018년에도 글로벌 경기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산업경기를 반영하는 Goldman Sachs의 글로벌 선행지수(GLI, Global Leading Indicator)가 2017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다가 9월에는 하위 10개 지표 중 9개가 개선되며 상승 조짐
 - IMF도 2017년 10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세계, 선진국, 신흥국, 한국의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⁴⁾

〈그림 19〉 Headline GLI 추이



주 : GLI 원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Goldman Sachs

〈표 1〉 세계경제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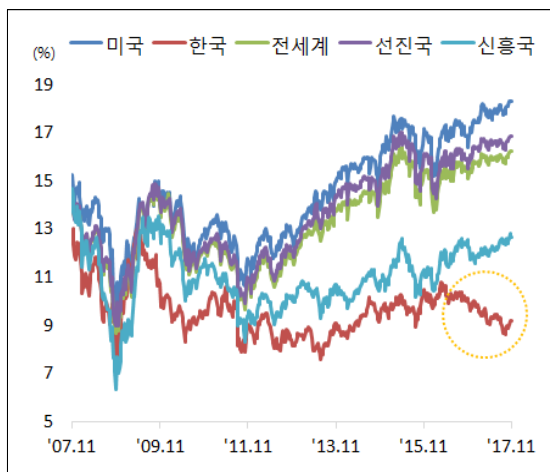
구 분	'18년		
	'17.7월 (A)	'17.10월 (B)	조정폭 (B-A)
세 계	3.6	3.7	0.1
선진국	1.9	2.0	0.1
신흥국	4.8	4.9	0.1
한 국	2.8	3.0	0.2

주 : 한국은 '17.4월 전망 수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이와 같은 글로벌 경기 개선은 기업의 매출 확대, 위험자산 선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외 여건 하에서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에 향후 상승 가능성이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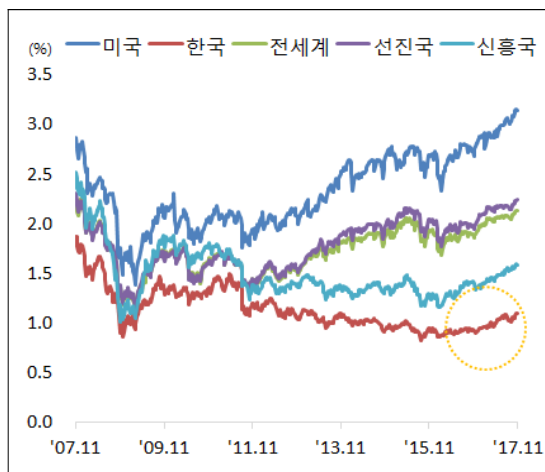
4) 2017년 11월에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

〈그림 20〉 글로벌 MSCI 12개월 선행 PER



자료 : Thomson Reuters

〈그림 21〉 글로벌 MSCI 12개월 선행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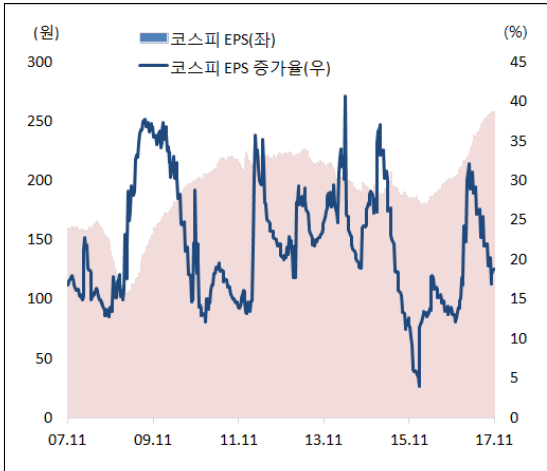


자료 : Thomson Reuters

- 한국 MSCI 12개월 선행 PER의 경우를 보면 2017년 12월 현재 약 8.9배로 글로벌 증시 및 10년 평균인 9.6배보다도 낮은 수준⁵⁾
- 주가대비 순자산가치 비율인 MSCI 12개월 선행 PBR도 2017년 12월 현재 1.08배에 불과
- 한편 양호한 기업이익의 전망도 코스피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의 경우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은 하락 추세이기는 하나 현재 18%로 여전히 높은 수준
- 2018년에도 수출 전망이 긍정적인 점도 이를 뒷받침
 - 2017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2018년에도 글로벌 경기 개선, 반도체 시장 호황 지속 등에 따라 양호한 수준을 보일 전망
 - 미국 및 중국 제조업지수의 상승 추세도 향후 교역 규모 증가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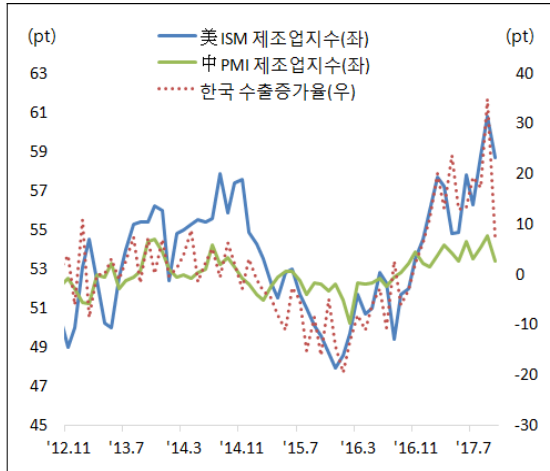
5) 주가 상승폭보다 기업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며 PER는 오히려 하락

〈그림 22〉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및 증가율 추이



주 : EPS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Thomson Reuters

〈그림 23〉 미·중 제조업지수와 한국 수출증가율



주 :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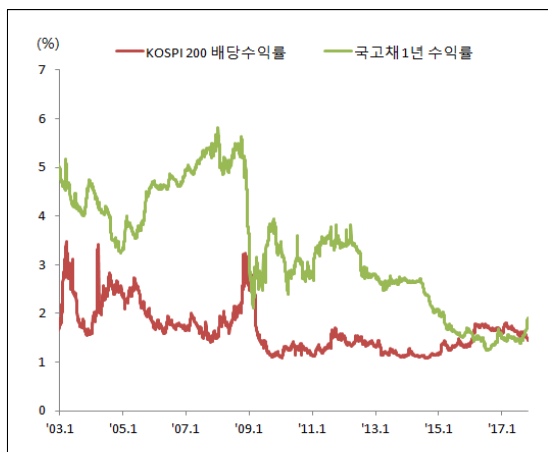
○ 다만, 배당 매력 감소 가능성, 북한 리스크는 국내 증시에 있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배당 매력이 감소할 전망
 - 2016년에는 코스피 200의 배당수익률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고채 1년 수익률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각종 정부 정책(6)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 데 기인
 - 그러나 동 추세는 2017년 중반 들어 시장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을 반영하며 상승함에 따라 다시 역전되었고, 앞으로도 완만한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2017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배당 장려 정책들이 폐지됨에 따라 배당에 대한 유인은 다소 감소할 전망

6)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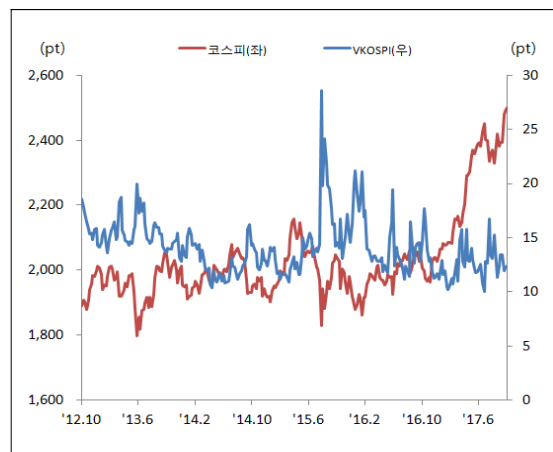
- 북한과 미국 간 갈등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
 - 2017년에는 북한 도발에 대해 이전과 달리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대응함에 따라 주요국 증시가 조정 장세를 나타내는 등 긴장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데에 유의할 필요

〈그림 24〉 코스피 200 배당수익률과 국고채 1년 수익률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그림 25〉 코스피와 VKOSPI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II. 금융산업 전망

1. 은행업

□ 2018년 은행업 경영실적은 전년대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성장성이 전년 수준에 그치고,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의 추가적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다만,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성장성) 생산적 금융 등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정부정책 방향, 기업대출태도 강화기조 약화 등으로 기업대출은 증가하지만 규제강화(바젤 III, 가계부채 등), 국내경제 회복세 소폭 둔화 등으로 성장성은 전년 수준에 그칠 전망
- (수익성) 시장금리 상승과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 변화로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이 개선되면서 이자이익은 증가하지만, 규제강화 추세, 업권내·업권간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성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다소 악화될 전망
- (자산건전성)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 진척, 기업실적 향상 기대 등 우호적 요인과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 증가 등 비우호적 요인이 혼재하여 추가적 개선 가능성은 낮을 전망
- (자본적정성) 바젤III 자본규제에 대응한 자본확충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수익성 향상으로 인한 자본여력 확보 등으로 양호한 수준 유지 전망
 - 반면, 기업대출 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은 자본적정성 유지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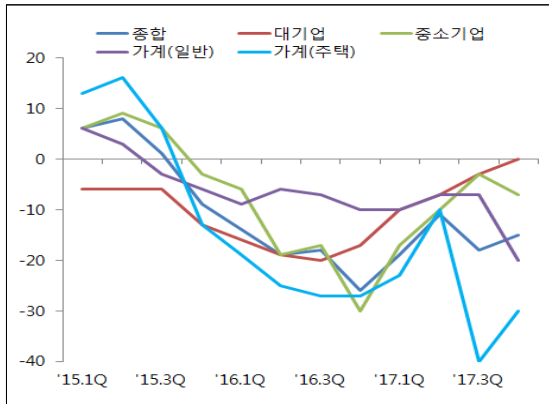
□ (성장성) 정부정책, 기업대출태도 등 우호적 요인과 규제강화 등 비우호적 요인이 혼재하여 전년 수준에 머물 전망

- 정부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생산적 금융’을 금융정책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함에 따라 기업 앞 자금공급 압력 확대
 - 건전성 규제의 변경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⁷⁾하는 한편, 4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현행 20조원에서 2021년 4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
 - 혁신모험펀드와 연계된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 마련(2017년 11월)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 개편(2017년 9월)⁹⁾,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도 기업대출에 우호적인 정책요인

7) 예대출 및 자본비율 산출시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음
 8)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①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신규 조성, ②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 등이 M&A, 설비투자 등 대규모자금 필요시 20조원 규모 자금공급 등이 실행될 예정
 9) 2017년 8월 한시 한도증액분 5조원 상시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중개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로 인해, 총 한도 25조원대비 약 70% 수준인 지원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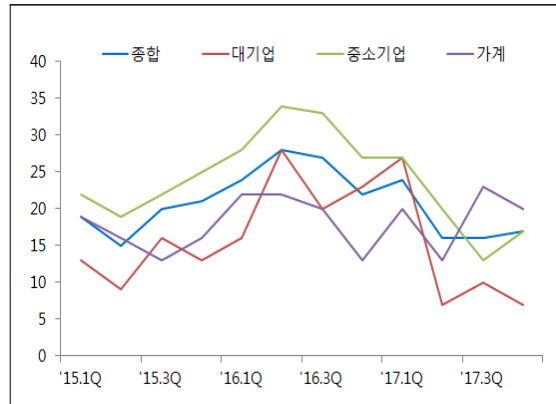
- 대출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기업대출 성장성에는 긍정적으로, 가계대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대출공급) 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경계심리 약화, 구조조정대상 대기업 감소세 등 감안시 기업대출태도¹⁰⁾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가계부채 관리대책 등¹¹⁾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태도는 2017년의 보수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그림 26> 대출태도지수 추이



주 : 0보다 클수록 대출태도 완화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7> 신용위험지수 추이



주 : 0보다 클수록 신용위험 증가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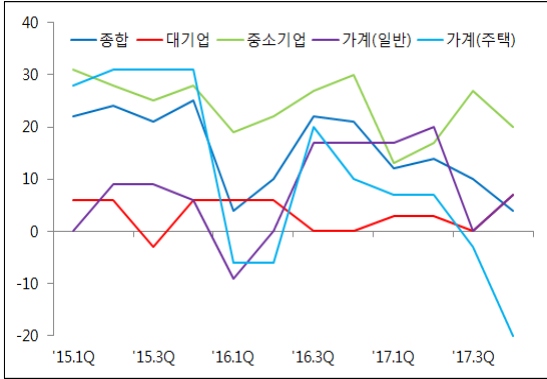
- (대출수요) 중소기업의 경우 운영자금 수요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목적의 자금보유 등으로, 대기업은 설비투자 심리의 소폭 회복¹²⁾,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수요 등으로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반면, 가계의 경우 전·월세자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관리정책에 따른 주택거래 축소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

10) 한국은행이 매분기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하는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결과” 참조

11) “8.2주택시장 안정화방안”(2017년 8월),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2017년 10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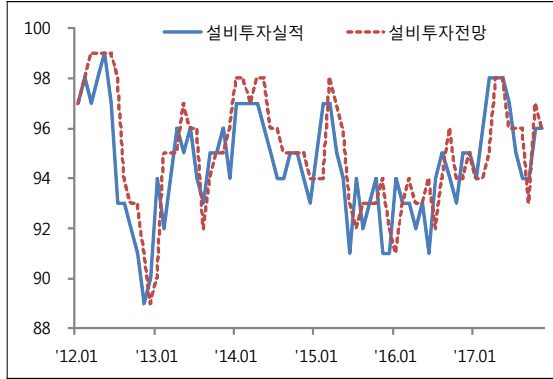
12) 설비투자 BSI(실적치)는 2015년말 91을 기록한 뒤, 2016년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된 바, 이는 설비투자 계획치에 근접하여 실행됨을 시사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BSI(전망치)는 기준치(100)를 다소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어 미약한 투자심리 회복을 반영

〈그림 28〉 대출수요지수 추이



주 : 0보다 클수록 대출수요 증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9〉 설비투자 BSI 추이



주 : 전망은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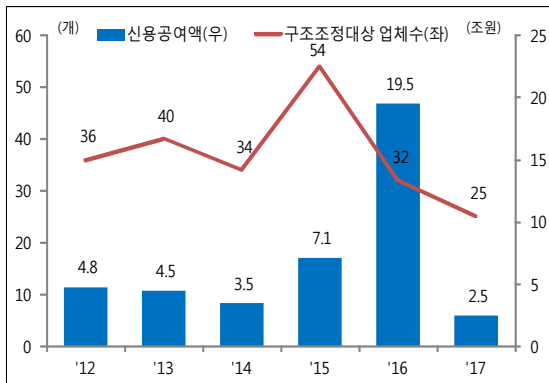
- 전년 수준의 경제성장률, 바젤 Ⅲ 및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에서 보듯 거시경제 및 규제환경은 대체로 성장성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¹³⁾됨에 따라 대출의 후행적 경기순응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거시경제 환경은 성장성을 제약
 -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규제 등 자본적립 최소기준의 단계적 상향, 2018년부터 도입되는 레버리지규제 등은 위험가중자산의 축소 기제로 작용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따른 대출한도(DTI·LTV) 축소,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으로 인한 분양 및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가계대출 성장세 둔화
 -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감축 목표수준¹⁴⁾, 주택구입 수요의 전세 전환, '18년 입주 물량 등 감안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13) 산업은행은 2018년 경제성장률을 2017년의 3.0%대비 다소 낮은 2.9%로 전망

14) 정책당국은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향후 5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전망치인 연평균 8.2% (종합대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보다 0.5~1.0%p 감소시키는 정도로 감축목표를 점진적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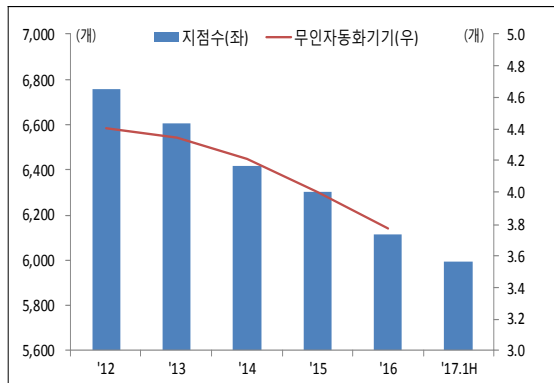
- 기업실적의 소폭 개선세, 조선·해운 등 업종의 구조조정 진행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 구조조정대상 업체수 및 신용공여액은 전년대비 감소¹⁸⁾
 - 특히, 5대 취약업종(건설,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의 구조조정대상 업체수가 전년대비 5개 감소한 12개사로 나타남
 - 신흥국의 성장세 확대, 세계교역량 증가, 대중국 약재(사드문제) 완화 등으로 대외환경도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점포 축소¹⁹⁾, 인력 감축, 비대면채널 활성화 등 비용효율성 개선 노력이 지속되는 점도 수익성 방어에 기여
- 국내은행들이 비대면거래 비중 확대, IT기술 발달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외형을 축소하여 온 가운데,
 -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온라인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P2P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소매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을 감안시 은행권의 다운사이징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²⁰⁾

〈그림 31〉 구조조정대상 업체수 및 신용공여액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32〉 국내은행 다운사이징 추이



주 : 무인자동화기기는 일반은행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18) 금융감독원(2017년 8월) “2017년 정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19) 국내은행 지점은 2012년말 6,757개에서 2017년 상반기말 5,990개로 큰 폭 감소하였으며, 일반은행의 무인자동화기기수도 2012년말 4.4만개에서 2016년말 3.8만개로 감소

20)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보유하지 않아, 판매관리비 절감효과를 예금·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 보유. 다만, 2018년에 대규모 명예퇴직 등 인력구조 개편이 시행될 경우 다운사이징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는 미흡할 전망

- 반면, 2017년에 발표된 ‘8.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정책은 DTI·LTV 축소, 新DTI 및 DSR 도입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위주인 가계대출의 수익기여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특히, 최근 가계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었던 일반은행의 경우 2018년 중 예상되는 주택분양 및 주택거래 축소는 부담 요인
- 자본규제의 단계적 강화 및 중장기유동성규제 도입²¹⁾은 자본적립 부담 확대,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을 제약
 - 또한, IFRS9 시행에 따른 충당금적립 증가²²⁾는 대손비용 측면에서 수익 감소요인으로 작용
- 우리은행 민영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확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확대 등으로 업권내·업권간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수익성 악화요인
 - 업권내 측면에서는 우리은행 민영화로 시중은행간 고객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영업확대에 따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가격변수(금리 및 수수료) 인하 압력이 확대
 - '17.11월 미래에셋대우, NH투자 등 5개 대형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대출시장 및 조달시장에서의 경쟁이 증가할 가능성²³⁾

21) D-SIB 추가자본 및 자본조정완충자본의 적립기준 상향, 2018년 1월부터 중장기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 Net Stable Funding Ratio) 도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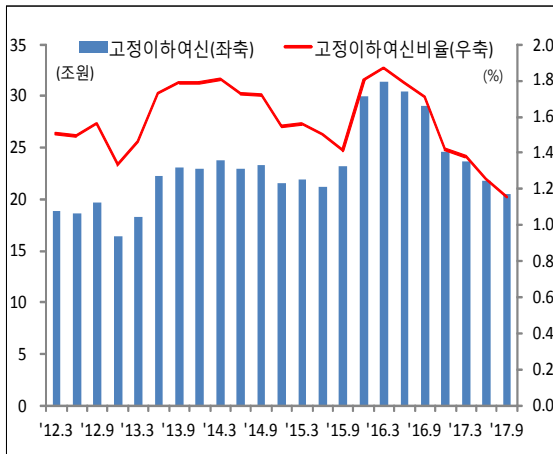
22) “IFRS9 적용에 따른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대신용손실모형 적용으로 4대 시중은행의 손실충당금이 2016년말 기준 약 0.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한국기업평가, 2017년 8월, “IFRS9 도입에 따른 국내 은행의 손실 충당금 영향은”)

23)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대형증권사에 대해 자금조달·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발행어음 영업 허용, 신용공여한도 확대 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2016년 11월)에 근거. 이로 인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해당안 시행에 따른 대형증권사의 기업대출 예상규모 등을 감안시 기업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자산건전성)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은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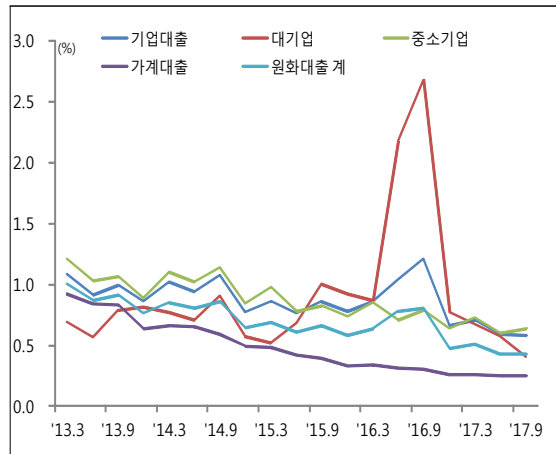
-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취약업종 기업 부실 증가로 2016년 3월말 1.87%까지 상승한 이래 하락세로 반전하여 2017년 9월말 1.15%를 기록
 - 이는 최근 취약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특수은행의 건전성이 회복된 데에 주로 기인²⁴⁾
- 부실 발생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연체율은 한진해운, STX조선해양 등 일부 취약업종 대기업의 법정관리 여파로 2016년 9월말 0.80%까지 상승하였다가, 기업구조조정 진행과 저금리 기조 등에 힘입어 2017년 9월말 0.43%로 하락

〈그림 33〉 국내은행 부실채권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34〉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24) 은행종류별 자산건전성 추이 : 일반은행(2014년말 1.39% → 2015년말 1.14% → 2016년말 0.82% → 2017년 9월말 0.69%), 특수은행(2014년말 1.83% → 2015년말 2.87% → 2016년말 2.39% → 2017년 9월말 1.93%)

- 중소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2014년 36.7%에서 2016년 38.7%를 기록하여 2.0%p 증가²⁷⁾한 가운데, 향후 원/달러환율 하락시 수출기업 중심으로 재산성 악화 우려 상존
- 또한, 취약업종인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채권비율은 '17.9월말 각각 12.24%, 3.87%로 은행권 전체 부실채권비율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자본적정성)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양호한 수준 지속 전망

-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2014~15년 중 하락하다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
- 2017년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²⁸⁾은 15.40%, 기본자본비율은 13.29%, 보통주자본비율은 12.72% 기록

〈표 3〉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단위 : %)

	'13.12	'14.12	'15.12	'16.12	'17.9
총자본비율	14.53	14.00	13.91	14.81	15.40
기본자본비율	11.79	11.38	11.36	12.51	13.29
보통주자본비율	11.19	10.83	10.82	12.01	12.72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규제 등 자본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레버리지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들의 자본확충(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자본적정성 유지에 우호적 요인
- 또한, 2017년 들어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향상됨에 따라 이익의 내부유보 여력이 증가한 점도 긍정적
- 반면,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현재 기업대출 대비 낮은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시²⁹⁾ 발생하는 추가 자본적립 부담 등은 자본적정성에 부정적 영향

27) 한국은행, “2016년 기업경영분석”

28) 동 시점 미국은행의 총자본비율 14.52% 상회

29) 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16년말, %) : 가계대출 24.0, 주택담보대출 19.7, 기업대출 64.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2. 여신전문금융업³⁰⁾

□ (개관) 2018년에는 자산 증가세 둔화, 조달비용 상승, 건전성 저하 등으로 경영실적 개선이 어려울 전망

○ 국내 영업 중인 85개³¹⁾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 이하 ‘여전사’)는 2017년 상반기 중 양호한 경영실적 기록

- 총자산은 2017년 6월말 기준 124.7조원으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말 대비 10.6% 성장
- 순이익은 상반기중 8,90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 비경상적 요인으로 대손비용이 25.4% 증가한데 기인
- 건전성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부담 감소로 개선세가 지속
- 자본적정성과 유동성도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

〈표 4〉 여전사의 이익 추이

(단위 : 조원, %)

	'14년	'15년	'16년	상반기(1~6월)		
				'16년	'17년	증감률
고유업무 순이익	2.66	2.76	2.81	1.35	1.29	△4.7
할부금융	1.12	1.10	1.14	0.57	0.59	+2.4
리 스	1.40	1.40	1.41	0.62	0.60	△4.2
신기술사업금융	0.14	0.25	0.26	0.16	0.11	△32.1
이자수익	4.20	4.16	4.31	2.12	2.26	+6.5
조달비용	2.63	2.41	2.35	1.19	1.18	△1.0
판 관 비	1.75	1.86	1.93	0.91	0.94	+3.4
대손비용	1.48	1.20	1.16	0.44	0.56	+25.4
당기순이익	1.03	1.32	1.54	0.96	0.89	△7.3

주 : 고유업무 순이익은 관련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

자료 : 금융감독원

30) 여신전문금융업은 할부금융업, 리스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으로 구분되나, 본고에서는 업무 유사성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비카드 여전업을 대상으로 분석

31) 2017년 6월말 기준 할부금융사 21개사, 리스사 26개사, 신기술금융사 38개사

- 2018년에는 금리 상승, 규제 강화 등 여전사들의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을 전망
 - 미약한 수준의 경기회복,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등
 - 특히, 시중금리 상승시 여전사의 조달 환경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한계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여전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하락 가능성

□ (성장성) 규제 강화, 자동차금융시장의 성장 둔화 등으로 영업자산 증가세는 악화될 전망

- 고유업무별로 2017년 상반기 중 신규취급액은, 할부금융이 8.0조원으로 11.3% 증가한 반면, 리스는 4.7% 감소한 5.5조원
 - 할부금융 증가는 할부의 89.7%를 차지하는 자동차할부 취급 증가에 기인
 - 리스 취급액 감소는 2016년부터 법인·개인사업자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³²⁾로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리스 수요가 감소한데 기인

〈표 5〉 여전사의 총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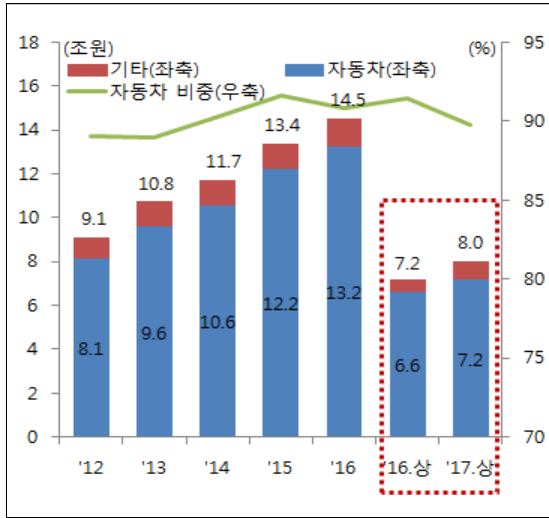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14년말	'15년말	'16.6월	'16년말	'17.6월말	증감률
고유업무 자산	38.9	44.2	46.2	47.8	49.6	+7.4
할부금융	16.5	19.2	20.3	21.4	22.6	+11.3
리 스	21.3	23.9	24.6	25.1	25.6	+4.1
신기술사업금융	1.1	1.1	1.3	1.3	1.4	+7.7
대 출 금	42.3	47.9	51.8	54.6	57.4	+10.8
기업대출	24.2	28.6	31.2	32.3	34.5	+10.6
가계대출	18.1	19.3	20.6	22.3	22.9	+11.2
기타	12.1	14.2	14.7	15.6	17.7	+20.4
총자산	93.3	106.3	112.7	118.0	124.7	+10.6

주 : 1) 증감률은 '16.6월말 대비 '17.6월말 기준
 2) 기타는 현금·예치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등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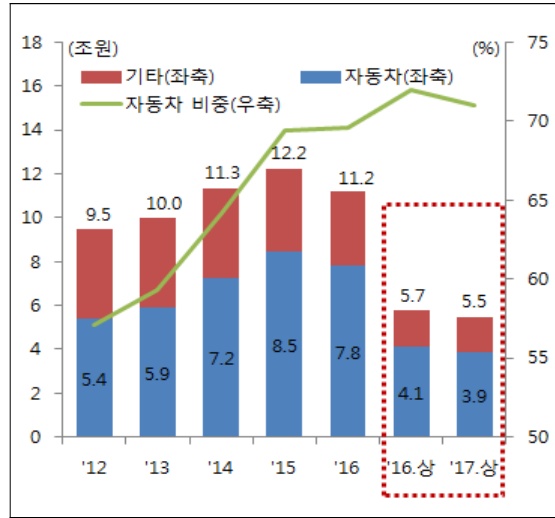
32) 기존에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 전액을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유지비도 제한없이 비용처리). 2015년말 세법 개정이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이 연 8백만원으로 제한되고,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천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함

〈그림 35〉 할부금융 신규취급액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36〉 리스 신규취급액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2018년에는 규제 강화, 자동차 리스 수요 감소 등으로 여전사의 자산 확대가 둔화될 전망

- 레버리지 규제³³⁾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 신설 등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온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금융³⁴⁾시장은 자동차 내수판매 성장 둔화로 성장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업권내 뿐만 아니라 금융업권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성장률 둔화 예상
 - 은행은 금리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토론 영업 확대,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 진출이 허용³⁵⁾되어 영업이 가능한 상황
- 기계류 등에 대한 할부·리스도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물적금융 수요 감소로 역성장 지속 전망

33) 총자산 규모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34) 할부금융과 리스의 신규취급액중 자동차할부와 자동차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상반기 기준 각각 89.7%, 71.0%로 여전사들의 자동차금융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

35) 저축은행은 신용공여액의 25% 범위내에서 할부금융업 영위 가능. 단,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의 전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 충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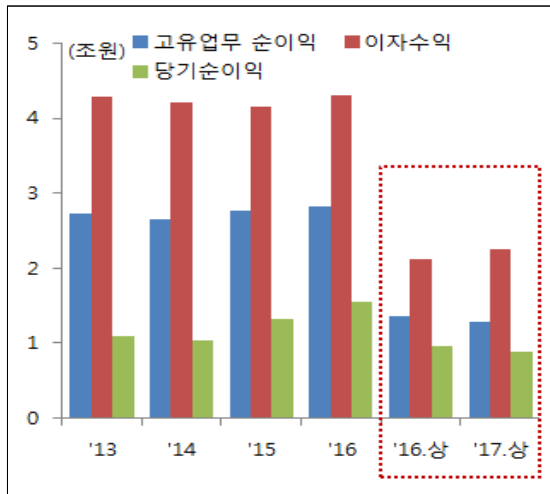
□ (수익성) 경쟁 심화, 조달비용 상승,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등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

○ 여전사의 2017년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하였으나, ROE와 ROA는 각각 9.7%, 1.5%로 금융업권 중 수익성은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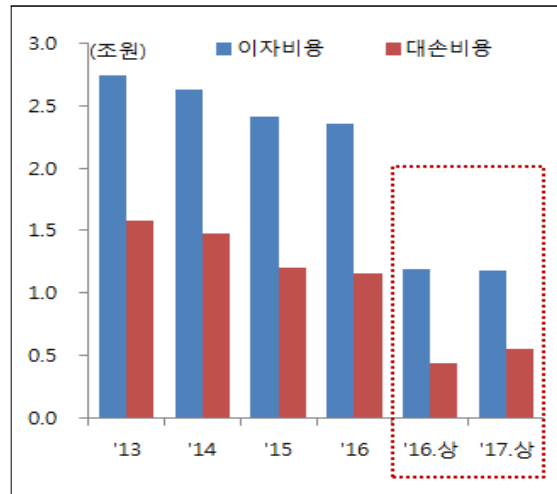
- 순이익 감소는 가계·기업 앞 대출이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5.6조원)하여 이자수익이 6.5% 증가(+1,378억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로 대손비용이 25.4% 증가(+1,125억원)한데 주로 기인

- 2017년 6월말부터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 대출에 대해 30%의 추가충당금 적립, 자산건전성 분류상 연체월수 기준 강화³⁶⁾

〈그림 37〉 고유업무 이익 및 이자수익 추이



〈그림 38〉 이자비용 및 대손비용 추이



주 : 고유업무 순이익은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 금융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관련비용을 차감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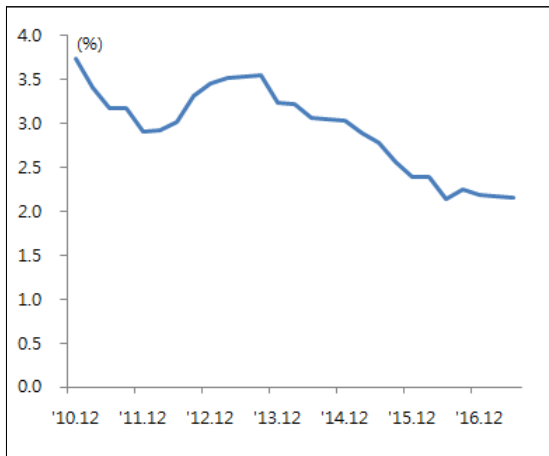
36) 자산건전성 분류상 연체월수 기준을 강화 : (정상) 3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 →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2018년에는 경쟁 심화에 따른 이자마진 감소, 시중금리 상승 전망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등으로 수익성 둔화 전망
 - 여전업은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자가 많아 산업내 경쟁 강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자동차금융시장은 업권내·업권간 경쟁이 심화
 - 여전사는 수신기능 부재로 자금조달을 채권발행,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 상승시 조달비용이 증가하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대손비용도 동반 증가할 가능성
 - 법정 최고금리가 2018년 2월부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어 이자마진 축소가 예상

□ (건전성) 향후 금리 상승시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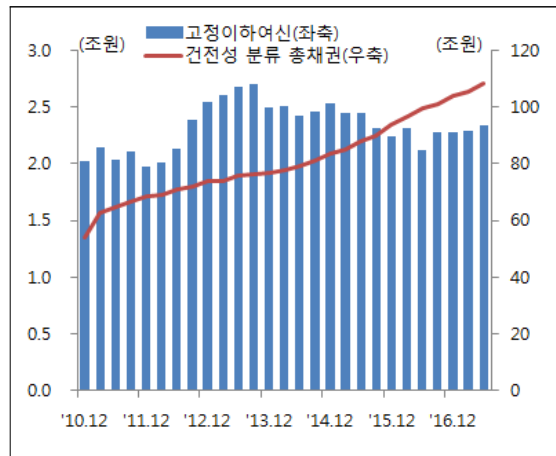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부동산PF 부실화 등으로 2010년 9월 4.2%까지 상승했으나, 2017년 6월말 2.16%까지 하락하여 자산건전성은 크게 개선
 -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감소하고, 건전성 분류 대상 총채권 규모가 201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한데 기인

<그림 39>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40> 고정이하여신규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2018년에는 여전사들의 건전성 개선추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실적개선 지연과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

□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자기자본 확충 및 장기성 자금 위주의 조달구조로 양호한 수준이 지속될 전망

- 조정자기자본비율³⁷⁾, 레버리지배수³⁸⁾, 원화유동성비율³⁹⁾은 2017년 6월말 기준 각각 16.3%, 6.7배, 160.7%로 양호한 수준
 - 레버리지 규제가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규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별 여전사들은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기자본 확충
 - 금융위기 이후 업계의 조달구조는 단기차입, 콜머니 등을 통한 단기조달 비중을 줄이고, 장기차입, 회사채 발행 등의 장기성 자금 위주로 개선
- 2018년에도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다만, 여전업의 수신기능 부재로 금융시장 경색시 자금조달 애로나 조달비용 상승 등에 대한 대비 필요

37) 조정자기자본비율 = 조정자기자본(기본자본 + 후순위채무 등 보완자본 - 영업권 등 공제항목) / 조정총자산 (총자산 - 현금 등 공제항목)

38) 레버리지배수 = 총자산 / 총자기자본

39)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